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반복되는 재해는 인재다	1
江原日報	04면	道 통합방위협의회	2
江原日報	03면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오늘 선출	3
강원도민일보	03면	오늘 국힘 도의회 부의장 후보 경선 3파전	3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정호 도의원 선고유예 최종 확정 의원직 유지	4
江原日報	05면	선거법 위반 강정호 도의원 선고유예 확정 의원직 유지	4
KBS	온라인	강정호 강원도의원 '선고유예' 확정...의원직 유지	5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정호 도의원 항소심 확정, 의원직 유지	6
철원신문	온라인	지포2리, 주민들과 화합·소통 경로잔치	7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지광천(평창) 도의원	7
강원도민일보	03면	집권 2년차 김진태 도정, 특보단 대대적 손질 나서나	8
江原日報	02면	道·홍천군·서울대 국가 감염병 신속 대응 협약	8
江原日報	01면	'파격 혜택' 기회발전특구 ... 시·군 경쟁 불붙는다	9
江原日報	01면	도 감사위, 교육기관 감사 예고에 제동 걸고 나선 신경호 도...	9
강원도민일보	02면	전북도 잼버리 파행 '강특법 3차 개정' 속도 조절 불가피	10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테크노파크 사업단장 업무추진비 유용 적발	10
江原日報	02면	난개발로 해변 명소 망가지는데 눈·귀 닫은 양양군	11
강원도민일보	01면	입추 지났는데... 도내 온열질환자 1년새 68% 증가	11
강원도민일보	01면	이상기온에 병해충 극성... 고랭지 배추도 소멸 위기	12
강원도민일보	01면	허탈... 막막...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국립강원대병원 주도 새체계 구축을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물놀이 사고 긴장 풀지 말아야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동해안 '해변 쓰레기' 몸살, 체계적 관리 시급하다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선거제 개편, 여야 9월 정기국회전 결론 내야	16

江原日報

‘극한’의 기후변화, 그에 따른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상기후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극한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와 대책에 따라 선진국의 기준이 바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접근 방법이 그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극한의 강풍, 산불, 폭우가 2023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근 수개월 사이 시간당 50~9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빈번해지고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쏟아지면서 홍수와 침수, 산

사태, 도로 유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의 예를 보더라도 막을 수 있는 재해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우리의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이 기본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세심하게 점검할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난 9일 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수직 관통한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내면엔 보이지 않는 위험과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은 결코 가벼이

강원포럼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태풍 오른쪽 반경의 강원 영동지방의 경우 최대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강릉과 삼척의 주요 하천이 범람했고 10일 밤 10시 기준으로 침수, 산사태 위험을 피해 경로당으로 대피한 인원은 도내 609세대 938명이었다. 도로 침수, 인명 구조·대피, 토사 낙석, 간판 낙하 등 총 358건의 태풍 관련 피

반복되는 재해는 인재다

〈人災〉

해 신고가 잇따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경찰청 모두 최고 비상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대응에 나서는 등 선제적 조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봐야 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해예측 시스템 등을 재난과 재해를 극복하는 데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포항 냉전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 기술

2023년 08월 17일 (목)

오피니언 19면

을 활용한 홍수 예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 해당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오송에서 또 되풀이됐다. 이러한 상황은

강원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다. 이번 제6호 태풍 ‘카눈’의 극한폭우 침수 지역은 해마다 같은 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폭우가 쏟아지던 시각, 각 방송사의 침수상황 보도 내용을 보면 강릉시의 경우 경포, 법원 앞 7번 국도 등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포남동 사거리는 빗물펌프장 확장 등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민 입장에서 보고 그 눈높이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 특례의 첫 단추는 재난 재해로부터의 안전이며 주민들이 폭풍주의보 예보에도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 예보 및 관련 시스템과 재난재해 극복 방안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도입 돼 실행돼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7일 (목)

사회 04면



道 통합방위협의회 2023년 3분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가 16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김도형 도경찰청장, 장광선 육군 제2군단장, 김용욱 농협 강원지역본부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태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3면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오늘 선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경선 ... 한창수·윤길로·김기하 3파전

속보=공석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본보 7월27일자 3면 보도)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17일 치러진다.

강원자치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11시 도의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5일까지 후보신청을 받은 결과 한창수(64·횡성) 기획행정위원장, 윤길로(60·영월) 도의원, 조선 김기하(63·동해) 도의원 순으로 등록을 완료,

세 명이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의장직 경선은 강원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참고해 진행된다. 후보 정견발표와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다득표자가 부의장으로 선출된다. 다만 첫 번째 투표에서 다득표 동수가 나올 경우 재투표를 진행한다. 재투표에서도 동수가 나오면 다선이 우선, 선수가 똑같은 경우 연장자가 뽑힌다.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부의장 후보자는 올 9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고 윤길로 도의원은 “조선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연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기하 도의원은 “조선 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 별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박찬홍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하게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깨끗한 선거관리를 하고 경쟁이 다시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3면

오늘 국힘 도의회 부의장 후보 경선 3파전

도의회서 5분 정견발표 후 투표

최다 득표 2명 이상일 땐 재투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17일 ‘3파전’으로 치러진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다.

한창수·윤길로·김기하 도의원(기호 순)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이날 5분 간 정견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한창수(횡성) 기획행정위원장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도의원들의 화합



한창수

윤길로

김기하

을 바탕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고, 윤길로(영월) 의원은 “의원들을 모두 대면했고, 소통잘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김기하(동해) 의원은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선은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08월 17일 (목)

사회 05면

선거법 위반 강정호 도의원
선고유예 확정 의원직 유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이 항소심 선고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도 의원은 검찰과 강 의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강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의정 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며 “특히 도민들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준 속초시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속초=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4면

강정호 도의원 선고유예 최종 확정 의원직 유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속초)에 대한 선고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강 의원은 지난 8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선고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공

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 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며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준 속초시민들께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2023년 08월 16일 (수)

사회

강정호 강원도의원 ‘선고유예’ 확정...의원직 유지



[KBS 강릉]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원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7일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에 선고유예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검찰과 강 의원 측이 모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 일로 강원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강원영동

2023년 08월 16일 (수)

강원

강정호 도의원 항소심 확정, 의원직 유지

박은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검찰과 강 의원 양측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벌금 25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문화매일, 누리일보 등 50개 언론사 보

철원신문

2023년 08월 16일 (수)
강원

지포2리, 주민들과 화합·소통 경로잔치

-이현위 이장“활기찬 지포2리 되도록 만들 것”



갈말읍 지포2리(이장 이현위)는 지난 9일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50여 명과 함께 경로잔치를 열었다.

마을 장년회·부녀회 주관한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철원군의회 박기준 군의장, 장용 의원, 엄기호 도의원, 이흥재 동철원농협 상임이사, 김희조 철원군바독협회장, 갈말읍 계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위 이장은“마을 주민들의 화합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노인회, 장년회, 부녀회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외분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활기찬 지포2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목)
인물동정 14면지광천(평
창) 도의
원은17일
오후 4시
평창읍사

무소에서열리는평창
읍주민자치위원회정
기회의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3면

집권 2년차 김진태 도정, 특보단 대대적 손질 나서나

도지사 자문기구 발족 준비 중
기구 구성 맞춰 특보 역할 정비
자문위 설치 작업 후 인선 논의
“특보 유지·교체 등 전반 검토”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 특보단 재인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도정시책에 대한 자문 등 도지사 공식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될 자문위원회가 새롭게 발족될 예정이어서 위원

장 선임 및 자문위 면면이 주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태 도정 1기 특보단(12명)은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이 가운데 현재, 언론특보와 정책특보 등 2석이 공석 상태다.

신현상 전 언론특보가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이민찬 전 정책특보가 국 민의힘 중앙당 상근부대변인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면서 특보직을 내려놨다.

이에 따라 언론특보, 정책특보 등 공백 메꾸기와 함께 집권 2년 차인 김진태 도정의 숙원현안 조기 해결 및 현안 조

을 등을 위한 2기 특보단 인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의회의와 긴밀한 소통 등을 위한 정무기능 강화 차원에 서 현 특보단의 역할 재분배를 비롯한 정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도지사 공식 자문기구 격인 자문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도는 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 오는 9월 도의회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 이다. 도는 전임 도정에서 운영했던 자문기구인 ‘행복한 강원도위원회’의 명

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 는 안 등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조직인 행복한 강원도위원회는 50명 규모로 운영됐었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내년 6월 8일부터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는만큼 특례 조항 적용에 대한 여론 수렴은 물론 3차 개정안 작업을 위해 도와 18개 시·군 소 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8기 도정에서 새롭게 발족하는 자문위 원회 구성과 함께 이와 맞물려 현 특보

단 및 2기 특보단 역할론이 어떻게 짜여 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기 특보단 인선은 자문위원회 구성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재설정될 전망 이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공석 특보직에 대한 인선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는 2기 특보단 인선의 경우엔 필요성을 최 중 검토해 특보직 유지와 교체 등이 전 반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라며 “자문위 구성 여부 등의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 이라고 했다. 박지은

江原日報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2면

道·홍천군·서울대 국가 감염병 신속 대응 협약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등 산·학·연·관 18개 기관은 17일 오후 2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에서 국 가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암·난치성 희귀 질환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 약(MOU)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성 질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제 개발 및 생산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협약기관들 은 면역학 및 항체분야 전문가 간 협 의체를 구성해 연구개발(R&D), 생 산, 산업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가적 감염성 질병에 대한 항체 연구 및 치료제 개발, 암을 비롯한 여러 난치성 희귀 질환에 대 한 치료제 개발 및 강원자치도와 홍 천군의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한국판 보스턴 클 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등을 통해 도와 협의체가 함께 세계 바이오산업을 주도 하는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1면

‘파격 혜택’ 기회발전특구 ... 시·군 경쟁 불붙는다

(지방 이전 기업 세제·재정 등 지원)

정부 내년 상반기 광역시·도별 1곳씩 첫 지정 전망
도, 사전 설명회 열고 후보지역 추리기 본격 돌입
도내 최소 9개 지자체 관심 ... 11월까지 제안서 접수

속보=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본보 6월8일자 2면 등 보도)을 위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국세·지방세 유예 등의 세제 혜택은 물론 보조금 확대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

로 후보군을 추리기 시작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를 기점으로 11월까지 도는 시·군으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식 제안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비공식 수요 조사에서는 도내 9개 시·군

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별 첫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광역시·도별로 한 곳씩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제안서 접수가 시작되면 실제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 입장에서는 우선 치열한 내부 경쟁부터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원주시는 이미 TF를 꾸려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 구상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횡성군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

진을 검토 중이다. 영월군은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등도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이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에 있는 동안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등을 유예해 주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 등이다. 지정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갖고 있다.

일정 수준의 산업 기반을 충족한 상태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정책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수립할 수 있을지가 지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1면

江原日報

도 감사위, 교육기관 감사 예고에 제동 걸고 나선 신경호 도교육감

“특수성 고려 우리가 진행해야”
강한 우려 표명 협의 필요성 강조
타 자치시·도와 공동대응도 거론

속보=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본보 16일자 1면 보도)인 가운데 신경호 교육감이 16일 “교육 분야의 감사는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피드백까지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에서 “도 감사위에서는 위중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한까지 갖게 되며 ‘권력 비대화’ 논란에 휩싸인 도 감사위를 향해 강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도 감사위는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면서 학교폭력이나 회계 비리 등 대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일선 학교에 대해

서도 직접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었다. 신 교육감은 “추후 잘 협의해(감사 권한을) 잘 지켜내겠다. 앞으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제주와 세종, 강원, 내년 1월 특별자치도가 되는 전북 등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도 감사위가 춘천 및 영월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감사 일정까지 밝히자 지역 교육계에서도 지방교육의 독립성 훼손 및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과도 직결될 수 있는 감사의 권한을 교육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도 감사위가 가져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여기에 도민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이 이끄는 도교육청을 도 감사위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감사위의 감사는 법률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2면

전북도 잼버리 파행 '강특법 3차 개정' 속도 조절 불가피

강원·전북도 전략적 협치 계획

여야 갈등에 개정안 논의 난항

연내 입법화 악영향 대응 모색

도 "정치권 대치상황 예의주시"

내년 1월 강원도에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의 잼버리대회 파행에 파로 인한 정치권의 정쟁이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규정을 보완한 3차 개정

입법화에 불뿔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출범과 동시에 이르면 연내 강특법 3차 개정을 입법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진행해 왔다.

3차 개정은 지난 5월 84개항의 2차 개정 당시 개정안에서 빠진 교육·농업·군사분야 등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특례규정을 추가 발굴, 강특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1월 18일 강원

도에 이어 5번째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하는 전북도 역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신산업 기업 세금감면 등 각종 규제완화가 담긴 232개 조항의 전부개정안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전략적 협치'를 통한 3차 개정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북도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전·현 정부의 책임공방을 빚게 된 논란의 중심지에 놓이면서 사실상 전북과의 연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에 놓였

다. 여기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의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잼버리대회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와 '묻지마범죄' 등 사회적 이슈를 놓고 여야간 갈등의 진원지로 떠올라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논의는 당분간 거론조차 하지 못할 처지다.

도는 이 같은 정치권의 대치 상황을 감안, 3차 개정작업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지켜보며 특례규정을 다듬어 왔는데 잼버리대회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몰려 특별자치도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악의 경우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또 관계자도 "3차 개정을 위해 전북과의 공조를 포함, 다각도의 입법화 방안을 고려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국회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대응방안을 차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2면

강원테크노파크 사업단장 업무추진비 유용 적발

도감사위, 위법사항 수사 의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강원테크노파크 종합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테크노파크 강릉분원 A사업단장의 업

무추진비 유용 등 위법 사항이 적발, 도감사위는 강원테크노파크에 해당 건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본지 취재 결과,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강원테크노파크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강릉분원 A단장의 업무추진비 및 연구과제 회의비 유용 혐의를 확인했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A단장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14건의 업무추진비 유용 및 회의 수당을 부정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이같은 위법사항과 함께 전수조사 실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강원테크노파크 감사실은 A단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테크노파크 감사실 관계자는 "도감사위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며 "내달 말까지 해당 사업단장의 재직기간 예산 유용 현황을 조사하고, 전수조사 결과물 도 감사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2면

난개발로 해변 명소 망가지는데 눈·귀 담은 양양군

/ 집중기획 - 동해안 천혜 경관이 사라진다 /

군, 남해리 등 주거진흥지구 해제 강행 유흥시설 난립 우려
죽도 등 고층건물로 미관 해쳐... 지경해변 개발 특혜 의혹도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7번 국도 가운데 양양군 남해리부터 북분리 10km 구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경을 가진 곳으로 유명하다.

이 구간에는 미항(美港)으로 꼽히는 남해항을 비롯, 천혜의 호수인 대호, 죽도정, 서평의 명소인 인구해변, 동산해변 등 유명한 명소들이 즐비하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절경이다.

하지만 이런 절경을 갖고 있는 명소들이 양양군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망가져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양양군은 '2030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남해리 일원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시키면 위락

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가 군 차원에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고층 건물도 군차원에서 맘대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역 개발'을 빌미로 바닷가 절경 주변에 20층 내외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경관이 사라지게 된다. 이들 경관 명소는 개발 명목이라는 지금의 단순한 유흥에 영원이 망가져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없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의 주거개발진흥지구 면적은 2022년에 819만792㎡로 2018년 818만4,469㎡와 비교해 6,323㎡ 증가했다.

이 기간 산업 개발 등 타 목적의 진흥지구 면적은 감소했지만 주민



◇양양군 한남면 인구·죽도·동산해변 주변에 20층 이상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등이 들어서며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빼어난 해안 경관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개발진흥지구 면적은 유일하게 늘어났다. 타 시·군의 경우 난개발 억제에 정책적 무게를 두는 반면 양양군은 오히려 외지 자본의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

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죽도 인근과 동산해변 등에는 고층 건물이 세워지며 이미 동해안 비경을 망쳐 놓았다. 특히 경치가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는 어김없

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한남면 지경리 해변가의 15만7,669㎡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에 19~22층 규모의 건물

을 짓도록 허가한 양양군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곳은 남양양 플레이트와 바로 연결되는 데다 해변을 끼고 있는 최고의 입지로 이를 대기업에서 차지한 것에 대해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 토지 옆으로 2차선 도로까지 군에서 개설해 주는 등 특정 기업에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대 모 교수(사회학)는 "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인기 동안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난개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진국처럼 바다의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존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동해안 경관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원이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각종 개발 시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개발 계획에 역점을 두겠다"며 "시·군의 일방적인 난개발에는 제동을 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정윤호기자

양양=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입추 지났는데... 도내 온열질환자 1년새 68% 증가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1면

말라리아 환자수 전국 두번째

'입추'가 지난지 일주일도 넘었지만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다.

올해 폭우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말라리아 환자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내 온열질환자가 지난 15일 기준 94명으로 늘었다. 이중 8월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만 61명에 달한다. 다행히 도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는 유독 무더위가

이어지는 올해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날 기준 도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56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해 같은기간 발생한 관련환자가 67.9%증가한 셈이다.

각 지자체들은 현재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을 운영하고 살수차 등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다.

폭우와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모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원도내 말라리아 환자도 지난해 환자를 이미 넘어섰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19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5

명의 말라리아 환자를 이미 뛰어넘은 규모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의 경우 1.24를 보여 전국 광역 시·도와 비교할 경우 2.3을 보인 경기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속출하자 질병청은 지난 3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 강원도는 '주의' 지역이다.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3급 감염병으로 파상풍, B형간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과 같이 관리되고 있다.

신재훈 ericjh@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1면

이상기온에 병해충 극성... 고랭지 배추도 소멸 위기

자구 열대화 시대 강원도가 끊는다

3. 폭염 증가에 고랭지농업 황폐화

태백·정선·삼척 등 열대화 심화

선충 피해 심각... 농사포기 속출

도 재배면적 10년간 20% 줄어

“이대로면 국산 배추 사라질 것”

지구열대화가 심화되면서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14일 방문한 삼척시 하장면에 위치한 이동열(58)씨의 고랭지 배추밭. 밭 곳곳에는 이미 선충피해를 입어 잎이 누렇게 말라버린 배추가 보였다.

씨스트 선충류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 태백, 2017년 정선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삼척, 영월, 강릉 등 인근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씨스트선충에 감염되면 배추 뿌리에 양분과 수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생육 저하, 결구불량 등이 나타난다.

이 씨의 배추 밭에서 선충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약 7년 전부터다.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가 점점 더 커졌

고 이제는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8월 초에 수확한 배추의 경우 밭 대부분이 선충 피해를 입어 제대로 수확도 하지 못한 채 밭에서 폐기해야 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이 씨의 주변에서도 농사를 그만두겠다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동열씨는 “확실히 해를 거듭할수록 배추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병해가 생기는 규모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산배추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고랭지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강릉시왕산면대기리에서 약 13만 2200㎡(4만평) 규모의 고랭지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최선동(57)씨의 경우도 배추가 이상기후로 인한 세균병 피해를 입고 있다. 기존에는 40일 정도만 넘기면 병 없이 출하가 가능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 탓에 출하 직전에도 세균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22년 기준 강원도 고랭지배추 총 재배면적은 4069ha로 전국 재배면적(5495ha)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상기후다. 폭염일이 증가하면서 고랭지 농업에 세균병이 돌기 시작했다. 도내 대표 고랭지작물 재배지역인 태백의 경우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를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11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폭염일수는 29일로 집계됐다. 10년 새 2배 증가한 셈이다. 강릉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27일이던 폭염 일수는 2014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146일로 늘었다.

반면 강원도내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5099ha이던 재배면적은 2023년 4069ha로 감소했다. 10년간 20.2%가 준 셈이다.

고랭지 배추 생산량 또한 매년 감소세다. 통계청 집계결과 지난 2018년도 내 고랭지 배추 10a당 생산량은 4908

kg이었으나 2021년에는 4470kg까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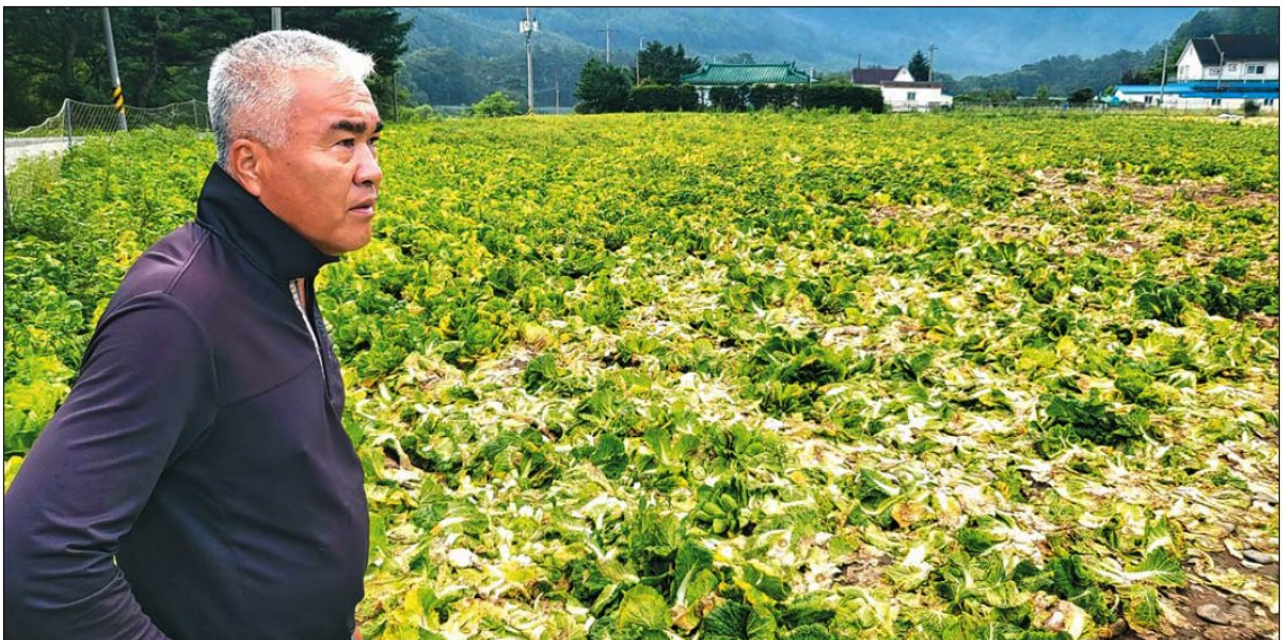
서영호 도농기원 토양환경연구팀장은 “농진청은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고랭지 농업이 가능한 곳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찰과 방제 등으로 병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목)

종합 01면



허탈... 막막... 삼척시 하장면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이동열(58)씨가 8월 초 수확이 예정돼 있었으나 선충 피해로 수확조차 하지 못한 밭을 쳐다보고 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목)

사설/칼럼 19면

국립강원대병원 주도 새체계 구축을

-최상위 공공의료 역할하려면 서울 압도하는 성장있어야

올해 들어 국립 강원대병원에서 전문의 8명이 퇴직했다는 소식입니다. 의료인력의 지속적인 이탈은 위기의 강원의료환경을 알리는 바로미터입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해 인력과 예산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대병원 장간담회에서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대형 규모화가 따르지 않는 근본 문제점 해소 없이는 녹록지 않습니다. 곧 국가차원의 대단위 예산 투입과 근본적인 체계 개선으로 강원대병원에 주도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강원대병원은 강원지역 공공의료 최상위 기관으로 서울의 우수한 민간 병원을 압도할 정도의 규모 확대로 경쟁력 있는 성장이 시급합니다. 인구가 적은 군단위 위주로 의료인력 유출이 심화되면서 필수 의료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어 강원대병원의 역할은 더 중요해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 진료는 물론 교육훈련, 인력지원 등 다양한 연계협력 활동이 원활하려면 규모화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공공의료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는 공통 현상입니다.

다. 시도별로 공공의료 확대 전략을 모색하며 대책에 나섰습니다. 충북대병원에서는 충주분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 곳도 있습니다. 한목소리로 지역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인재 선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공공 비율은 6%, 병상수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2005년 7월 '지방의료원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의료원 관리 권한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공공보건 의료 확충 종합 대책에 따른 여러 조치가 있어왔지만, 여전히 공공병원 수는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도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 의료,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해 국립 강원대병원이 주도해 가는 새로운 체계로 진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수준이 아닌 도내 곳곳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마련돼야 공공의료 강화에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암환자를 비롯한 중증 환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내에서 전문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정부 약속대로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를 실현하려면 재정 지원책부터 안정적으로 제시하는 게 순서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7일 (목)

사설/칼럼 19면

물놀이 사고 긴장 풀지 말아야

-사망사고 잇따라... 피서 막바지 관리 만전을

태풍 이후 막바지 피서에 나선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강원도내 바다와 계곡 등에서 연일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파악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음주 후 수영이나 안전 장비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름휴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심하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서객 개개인은 물론, 지자체와 안전요원들도 피서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피서 절정기인 8월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20~2022) 동안 수난사고로 인해 출동한 건수는 총 2371건으로, 그중 553명을 구조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8월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은 각각 961건과 196명입니다. 8월 출동 건수는 전체의 40.5%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여름철 수난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재난안전정보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도내 수난 구조 건수는 262건입니다. 그중 지난 7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수난사고로 인해 소방 당국의 구조 건수가

153건, 올해 발생의 58.4%에 육박합니다. 그중 7월이 95건이고, 아직 절반이나 남은 8월에만 57건의 구조가 속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 발생한 도내 수난사고 94명을 이미 뛰어넘은 셈입니다.

최근 도내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도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삼척의 간이수영장에서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구조된 아버지가 숨지는 등 4명의 사망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8월 20일을 전후해 동해안 해수욕장이 폐장하는 등 피서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장난감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잡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급류나 소용돌이가 있는 위험구역과 저수지, 댐, 방파제 등 금지구역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를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지정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는 자제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7일 (목)

사설/칼럼 19면

동해안 '해변 쓰레기' 몸살, 체계적 관리 시급하다

동해안 해변이 제6호 태풍 '카눈'에 휩쓸려 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관 훼손, 막대한 처리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어민 경제적 피해, 해양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저감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강원 동해안 5개 시·군이 14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쓰레기 양은 4,075톤이다. 이 중 84%(3,416톤)는 해변가로 쓸려 내려온 해양 쓰레기였다. 시·군별로는 양양 1,500톤, 고성 700톤, 삼척 560톤, 강릉 441톤, 동해 215톤 등이다. 강릉 정동진

해변 1곳에서만 160톤이 나왔다.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고 속초시 쓰레기 양이 포함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쌓여 있는 태풍 쓰레기는 한꺼번에 발

생하면서 분리 배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 후유증이 크다.

해안에 밀려 나온 쓰레기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해변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한다. 이제는 해양 관광의 선결 조건이 해양 쓰레기 처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에서는 산더미 같은 태풍 쓰레기에 걱정이 태산이다. 어민들은 어선 고장 우려 때문에 제대로 조업도 못 하고 있다. 나무토막, 플라스틱, 폴 등이 배 스크루에 걸리면 엔진이 파손되고, 냉각수 기계 미작동으로 인한 과열 위험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재정이 열악한 동해안 시·군은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1톤당 처리

비용이 40만원 정도인데 양양이 6억여원, 고성 4억여원, 강릉·삼척 2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32억원 이상이어야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고성을 제외한 5개 시·군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양 쓰레기는 지자체 힘만으로는 수거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해양 쓰레기 86%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변 쓰레기로 죽어 가는 바다를 살릴 쓰레기 발생량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수질 오염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중심

14일 현재 5개 시·군 바닷가에 4,000여톤

지자체 능력만으로는 처리 한계 불가피

어민 피해·해양 수질 오염 등 불 보듯 뻔해

이 돼 지자체, 지역 주민과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해변 쓰레기는 물론 폐어망·어구와 같은 바닷속 쓰레기까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변 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물체를 중독시키는 불청객이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여길 문제가 아니다. 바다가 쓰레기로 교란되면 결국은 인간이 해를 입는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특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오랜 세월 햇빛에 노출되면 잘게 부서져 결국 사람에게 해가 돌아온다. 육상 쓰레기의 바다 유입을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하다. 상시적이며 체계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 방안을 서둘러야 할 때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7일 (목)

사설/칼럼 19면

선거제 개편, 여야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내야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9월 정기국회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빠듯하고 각 정당마다 내년 총선 공천 작업에도 돌입, 시간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올 6월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각 정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2+2(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지만, 결국 합의를 위해서는 양당 지도부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원지역은 1996년 15대부터 2020년 4·15 총선까지 24년 동안 선거구가 다섯 번 재조정됐다. 18개 시·군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무시당하며 이리저리 쪼개졌다 묶이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20대와 21대 선거에서는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급하게 선거구가 확정됐다. 유권자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15대 당시에는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갑·을로 구분돼 전체가 13석이였지만 2000년 16대 선거에서 9석

으로 줄면서 큰 변화가 일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승자 독식으로 이어진다. 2020년 총선에서 1,256만여표(43.7%)는 사표가 됐고, 사표는 민주당이 압승한 수도권·호남과 국민의힘이 65석 중 56석을 점한 영남에서 많았다. 선거제가 유권자 뜻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독점을 심화한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를 쪼개고 합치느라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도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주어진 선택지에 기표도장을 누르고 돌아오는 것뿐이었다. 거대 양당이 급조한 비례대표 위성정당도 표심을 왜곡했다. 이러다 보니 의원은 정당 공천에 더 매달리고 여야 정쟁만 커진다.

이런 상황이기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당연하다. 이번 개편은 인구수 기준의 일도양단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입장과 대표성, 면적 등 지역의 특수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는 곳과 투표하는 곳을 따로 정한다면 당선자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는 지역 대표성은 뒷전으로 한 채 표의 유흔리만 계산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